

전남도-베스타스社, 해상풍력 터빈공장 구축 재확인

김영록 지사, 헨릭 회장과 면담...조속 착공 등 논의 물동량 확보·정부 정책 지원 건의 등 함께 나서기로

김영록 전남지사가 14일 도청에서 헨릭 앤더슨 베스타스 회장과 터빈공장 착공 연기에 따른 대책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등 상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지사와 헨릭 회장은 이날 터빈공장을 2년 내 착공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물동량 확보를 위해 신안 집적화단지 조기 지정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적기에 추진되도록 정부 정책 건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베스타스와 협력 가능한 국내 기업 발굴·육성,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 등 협력사업 발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헨릭 회장은 "전남도가 해상풍력 협

력 파트너로서 변함이 없다"며 "전남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돼 물동량이 확보되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베스타스가 목포신항 부지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공장 설립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전남도민의 우려가 크다. 전남도는 베스타스가 빨리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상호 협력 사업을 통해 전남 해상풍력 보급·확산에 차질 없도록 베스타스가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면담 후 해상풍력 터빈이 그려진 전통 부채에 김 지사와 헨릭 회장이 서명하고 교환하면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전남도는 세계시장 위기 속에서도 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14일 도청을 내방한 베스타스 헨릭 앤더슨 회장 일행과 면담을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상풍력 보급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실효성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현재 국회 여야 모두 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해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재생에너지 4법'인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분산에너지 특별법,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개정,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해상풍력 시장 확산과 안정적 물동량 확보를 위해 3.7GW의 신안 집적화단지가 조속히 지정되도록 추진하며, 도내 해상풍력 사업 중 1GW 규모의 신안 해상 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에 터빈 입찰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서남권 중심의 해상풍력 사업을 동부권으로 확대해 지역 주력산업 제도 약, 재생에너지100(RE100) 달성과 함께 해상풍력 시장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목포신항과 해남 화원산단을 중심으로 베어링, 기어박스 등 부품 및 유지보수 협력업체를 유치·육성해 해상풍력 기자재 클러스터를 조성, 안정적 공급망 체계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내년 시행 '전남 출생수당' 전문가 의견 수렴

복지부 토론회서 재정 지속가능성·관리 방안 등 논의

전남도와 보건복지부는 14일 목포 상그리아 호텔에서 전남도 시·군 출생수당 사전협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지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선 '전남도-시·군 출생수당'의 시·군 수당 지급에 따른 재정 지속 가능성과 향후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거쳐 오는 28일 제1회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시·군 출생수당의 사

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토론회는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각 세션 좌장은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와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장이 이상은 숭실대 교수가 맡았다.

1세션에선 오병기 전남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이 '전남 출생수당 정책 도입의 시·군 재정영향 전망', 2세션에선 김원신·최지혜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전남도-시·군 출생수당 도입에

따른 재정점검 및 사업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자로 홍근석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희재 창원대 교수, 박상하 사회경제연구원 이사장, 정인경 전남여성가족재단 실장, 고두갑 목포대 교수, 박해림 지방세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여 출생수당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도-시·군 출생수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과 육아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발전 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전남에서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 아동이 타 시·도로 전출을 가지 않는 한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2025년 1월부터 전남도-시·군 출생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도 수당은 지난 8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으며 '전남도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내년 1월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양시원 기자

중국제수입박람회 전남 제품 인기

도, 8개 우수기업 참가 지원 1천952만달러 수출상담

전남도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 역분부는 14일 "최근 6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4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참가를 지원, 총 137건 1천952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 촉진을 목표로 중국 상무부와 상하이시 정부가 주최한 중국 최대 규모 국제 박람회다. 120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3천496개 기업이 참가했다.

전남에선 매일식품(주) 소스류, ㈜현대푸드 오징어 등 식품건어물, ㈜예교

월드팜 구강케어상품, 사단법인한국 천연염색 천연염색 의류, ㈜제이에이에서 전복 등 수산물 가공품, ㈜마린테크노 콜라겐화장품, 맑고맑고따뜻한협동조합 유자가공품, 울바름 유기농 쌀과자 등 8개 기업이 우수 상품을 선보였다.

전남도는 박람회 참가 기업이 중국,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도록 부스 임차료, 통역비, 물류비, 항공료 등을 지원했다. 박람회 이후에도 현지 바이어와의 후속 협상과 마케팅을 지원해 수출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양시원 기자

광주 창업기업 '리버트리', 공공데이터 활용 2년 연속 우수상

행안부 경진대회 중기부 장관상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출전한 창업기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상을 받았다.

광주시는 14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

진대회'에서 도서관을 통한 공공데이터 스마트검색 시스템을 개발한 지역 창업기업 '리버트리' 팀이 우수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주)리버트리는 지난해 9월 광주시로 이전한 우수 기술 창업기업이다. 공공기관이 자체 보유한 신뢰성 있는 연구

보고서나 간행물 등을 도서관에서 검색해 이용자의 PC나 휴대폰에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인 '데이터의 서재'를 개발했다.

리버트리는 지난 6월 '제10회 광주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광주 대표로 행정안전부 본

선에 참가했다.

지역 예선을 통과한 전국 60개 팀이 행정안전부 본선에서 역량을 겨뤄 최종 10개 우수 제품을 선정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창업기업인 리버트리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기쁘다"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지속 발굴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성강 기자

광주시, 내일 전일빌딩245서 '시민사회 네트워크 축제'

광주시는 14일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2024 시민사회 네트워크 축제'를 오는 16일 전일빌딩245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서와 공익활동, 반기워 시민사회'를 주제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광주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마련한

첫 번째 축제로 환경·교육·인권·사회복지 등 공익활동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사회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시민사회 아카이브 전시, 공익활동 네트워크 등이 열린다. 또 공익활동의 가치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영역 별 맞춤형 부스가 운영된다.

/박성강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알고당사다

개인형이동장치

01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범칙금 10만원

02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범칙금 4만원

03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04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범칙금 10만원

05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